

# “尹정부, ‘전북 죽이기’ 민낯 드러내”

### 민주 이춘석 의원, 국토부부터 전북지역 추진 사업 현황 보고받아

### 올해 신규사업 6건에 19억8000만원... “국가 균형발전 위해 싸울 것”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입기가 시작된 지 50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현 정부의 의도적인 특정 지역 죽이기에 처참함을 느낀다.”고 울분을 표했다.

16일 이춘석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북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는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였다.

이춘석 의원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국 유일하게 전북 사업만 빠진 사실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일주일 내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전북 사업을 보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토부는 2024년 전북지역 예산 현황으로 총 45개 사업 목록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들 중 9개는 이미 사업이 완료돼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올해 예산이 편성된 36개의 사업 중 29개는 이전부터 시행 중이던 지속사업이고, 신규 사업은 △수소도시지원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춘석 의원실 제공)

10억원, △전북·임실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 각 2억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4,000만원,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사업지원(도시화할 육십령 가이비유터 조성사업) 3억원, △송학교차로 개선사업

1억4,000만원으로 단 6건에 금액은 19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도시재생사업 26억원이 올해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 지원예산 중 지자체로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토부 예산이 50억 원도 채 넘지 않는 것이다.

/이만호 기자

## “尹정부 쌀값 안정대책, 실상은 ‘농협재고 장부같이’”

### 민주 윤준병 의원 “농협에 10만톤 해소 책임 전가에도 구체적인 협의조차 없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16일 “윤석열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쌀값 반등에 효과없는 ‘농협재고 장부같이’라며 “정부는 농협에 10만톤 해소 책임을 전가했음에도, 처리계획은 물론 구체적인 협의조차 없었다”며 농식품부의 여처구니 없는 행정의 진면목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윤 의원은 “지난 6월 윤석열 정부는 정부 매입 5만톤·농협 10만톤 자체 해소 등 총 15만톤 규모의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했다”며 “쌀값 하락을 반등시키기 위해선 시장 재고물량 12



윤준병 의원

만톤을 매입(격리)해야 하지만, 정부 매입 5만톤 중 4.4만톤이 농협 재고물량이다”며 이번 대책이 쌀값 안정에 영장조차 주지 못하는 ‘농협 재고 장부같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너무이, 농협이 자체 해소해야 할 10만톤도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조차 없이 발표부터 한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농정행정 난맥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5만톤이면 현재 쌀값의

하향 추세가 멈춘다는 보장이 있다’는 질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은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쌀값은 작년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 15% 넘게 감소했고, 이에 따라 농협의 쌀 재고량(55.1만톤)의 매입가격 대비 쌀값 하락에 따른 손실규모만 무려 1,084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농협의 손실은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감수성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쌀값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정음=김대환 기자

## “국민 이동권 보장하겠다는 정부, 대광법에서 도민 배제”

### 도의회, 이병철 의원 발의 ‘대광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6일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병철 의원(전주7)이 발의한 ‘지방소멸 가속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에서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대도시권 범위를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된 탓에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가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지원에서 배제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 시행예산으로 세운 127조



이병철 의원

1,192억원 중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점점 낙후해 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이다.

특히, 건의안을 발의한 이병철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률의 개정안이 여전히 계류돼 있음은 물론 전북과 전북도민을 배제하는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전북을 교통요지에서 불모지로 전락시키려는 정부의 차별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병철 의원은 “전북과 마찬가지로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의 경우,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정부로부터 21조 원가량의 막대한 SOC 예산을 지원받아 고속도로가 만들어졌고, 오는 2027년에는 고속철도의 개통을 앞두고 있다.”라며, “그 결과 강원도는 4년간 유입인구가 연속으로 증가했고, 이는 교통망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철 의원은 “광역시의 부재는 전북과 도민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며, 전북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지 않는 대광법을 반대한다.”며, “조속히 대광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 “고창·부안도 원자력안전지역자원시설세 지원해야”

### 김성수 도의원, 지방재정법 재개정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41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을 포함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정부에서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광역시·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로 확대하는 지방재정법을 올 2월 개정해 시행 중이다. 개정 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김성수 의원

소재지 광역지자체와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에 각각 35%와 65%를 배분하였지만, 개정 이후 광역지자체 35% 중 20% 안의 범위에서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에 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에 포함된 기초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고창군과 부안군을 비롯해 5

개 기초지자체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는데도, 원전 소재지가 있는 광역시·도에 포함돼 있지 않은 이유로 원자력안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수 의원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모든 지자체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하도록 지방재정법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지자체에 방사선 방재 대책 등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 “인구변화 따른 중장기 학교 재배치 검토를”

#### 윤영숙 도의원



윤영숙 의원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감소와 인구 이동에 따른 지역별 각급 학교 재배치 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익산 3)은 16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변화와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별 학교 재배치 검토”를 촉구했다.

윤영숙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인구감소와 인구이동으로 도시는 급격히 변했지만, 지역별 교육여건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장기적 관점에서 학교 재배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 전 북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2014년 24만2,484명에서 2024년 현재 17만8,798명으로 6만3,686명이 감소했다. 학교 수는 2014년 761개교에서 2024년 767개로 1개교가 감소했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전주, 군산, 익산을 비교하며, 전주시는 2014년 초·중·고 학교 수 133개교에서 2024년 145개교로 12개 학교가 늘었고, 군산시는 2014년 학교 수 90개교에서 2024년 86개로 4개 학교가 줄었다. 학생 수로 보면 전주는 지난 10년 동안 19,386명, 군산은 7,168명이 감소했다. 전주의 경우 전북지역 초중고 학생 수 감소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이지만, 오히려 학교 수는 증가했다.

반면 익산시의 경우 지난 10년 학교 수의 변화는 없었고, 학생 수는 1만3,270명이 감소했다.

윤영숙 의원은 “인구감소와 이동으로 도시와 지역의 여건이 급격히 변했지만, 전주를 제외하고 지역의 교육여건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익산의 경우 부송4지구 개발 지연과 학원 인구 감소로 학교설립 계획이 취소되는 등 지역별 교육여건 편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익산시 인구는 2024년 6월 말 현재 총 26만2,888명으로 1994년 대비 56,048명이 감소했는데, 도심 동 지역은 9,577명, 농어촌 읍면지역은 4만6,471명이 감소했지만, 교육여건은 1980·90년에 머물러 지역의 교육격차를 유발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 “과대포장 기업유치, 일자리 없어 도민은 떠나”

#### 김명지 도의원



김명지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1)이 16일 제41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해각서로 과대포장된 기업 유치 실적에 도민의 공분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도민을 향한 진심성 있는 도정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밝히 눈길을 끌었다.

민선 8기 3년 차에 접어든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년(2022. 7. ~ 2024. 6.) 동안 130개의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역대 최대 투자 규모인 12조 8천억 원을 돌파했고, 1만 3,695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했으나 이는 양해각서 상에서 다루어진 내용이었다.

실제로 토지는 510만㎡ 중 62.7%인 320만㎡에 대해 투자가 이루어

졌으나 자본 투자는 12조 8,394억 원 중 6.3%인 8,073억 원, 일자리 창출은 13,695개 중 4.0%인 551개로 나타났다.

또한, 130개 기업 중 아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체 수는 42.3%인 55개로 나타났으며, 60여 개의 기업의 자본투자나 일자리 창출이 양해각서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 양해각서 수준과 동등하거나 이보다 더 많은 기업체 수는 자본투자 7개, 일자리 창출의 경우 10개가 채 되지 않았다. /이만호 기자

## “전북·무주, 남북교류 중추적 역할 해야”

#### 윤정훈 도의원



윤정훈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정훈 의원(무주)이 제41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북교류의 출발에 전북과 무주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때”며, “전북이 직접 북한과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윤정훈 의원은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는 북한 ITF시범단과 한국 WTF시범단이 교류하며, 분단을 와해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태권도의 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태권도의 저력과 달리 남북교류가 정권마다 추진과 원점복귀를 반복하는 탓에 태권, 씨름과 달리 태권도는 아직도 국가무형유산으로 등재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가무형유산 등재는 유네스코 유형문화유산 등재의 초석이 되기에 국가무형유산 등재

이후 윤정훈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태권도 중추도로서 더는 정권마다 남북교류를 기대만 해서는 안 된다.”라며, “전북도가 통일부와 협의하여 북한과 스포츠 교류와 협의를 이어나가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에 중추적 역할 물론, 태권도 유네스코 지정에 대해 추진단을 꾸려 노력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지원계획’에 담아 추진력을 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전북이 남북한 교류 및 통일 한국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실록의 역사를 제시했다. /이만호 기자